

대청 · 충주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허 승 욱* · 우 장 명**

Developing Strategi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round the Daecheong and Chungju Dam

Heo, Seung-Wook · Woo, Jang-Myu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n establishment of developing strategi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EFA) around the Daecheong and Chungju Dam. To establish strategic target, a series of farm household survey were conducted for farmers residing around the Daecheong and Chungju Dam.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is 233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farmers recognized that EFA is fit for around Daecheong and Chungju Dam as well as the prospects is very bright. In conclusion, the main streams to develop EFA are come up with vision and purpose around dam area, systematic conne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apability around dam area, construction of organic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connecting propulsion with green tourism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upgrad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ey words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dam, developing strategies

I. 서 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댐의 사용 가치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는 청정환경과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친수환경(親水環境)으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질 보호와 개선은 물론 삶의 풍요로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자연

* 대표저자, 단국대학교 교수

**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에 대한 경의와 친화를 느낄 수 있는 지역, 즉 휴양공간과 정서순화의 공간으로서도 이용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려한 전원 경관을 기반으로 자연학습 체험장 등으로 댐 주변지역 공간의 활용성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여러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과 주민들의 불편, 지역의 낙후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의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발전대책의 제시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친수환경체계의 구축과 농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환경문제 및 수질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은 댐 주변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다. 친환경농업은 생산방식의 친환경성 이외에도 농업용수와 일반용수 및 상수원으로 쓰이는 물에 유입되는 부산물(폐기물)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방지와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호소의 부영양화를 감소시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농가 차원에서도 청정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부가가치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가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이 대부분 농업 지역이므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전략의 수립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실태

1. 농업 및 규제지역 현황

충청북도의 농가수, 농가인구,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현재, 충청북도 전체 농가수는 85,228호이며, 농가인구는 247,606명(가구당 농가인구 2.9명)이고, 경지면적은 132,187ha(가구당 경지면적 1.55ha)이다. 경지면적 중에서는 논 면적이 64,084ha, 밭 면적이 68,103ha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댐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농업 규모는 청원군,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의 순이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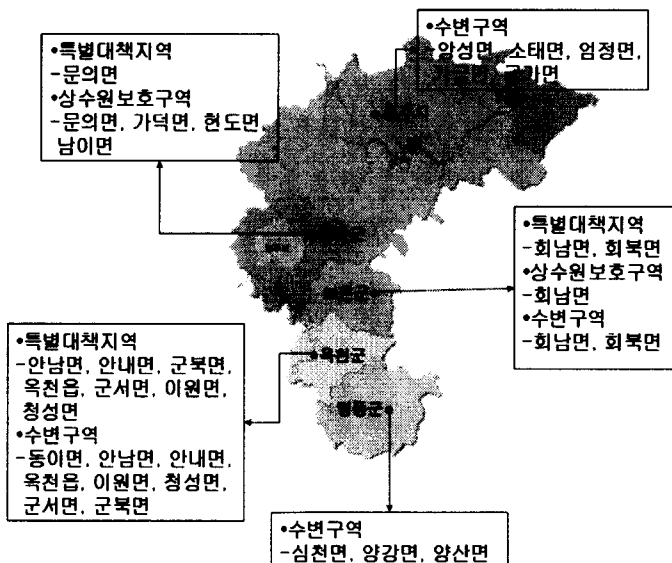
대청·충주댐 주변의 규제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이 해당되는데, 특별대책지역은 청원군(문의면), 보은군(회남면, 회북면), 옥천군(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이 포함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원군(문의

〈표 1〉 댐 주변지역의 농업 현황

(단위 : 호, 명, ha)

구 분	충청북도			청 원 군			보 은 군		
	1998	2000	2002	1998	2000	2002	1998	2000	2002
농 가 수	95,070	92,132	85,228	15,711	13,956	13,402	7,479	7,407	6,551
농가인구	299,791	277,534	247,606	54,104	44,681	43,841	20,930	20,076	16,570
경지면적	136,905	134,587	132,187	21,085	20,809	20,477	11,018	10,865	10,598
논 면 적	66,060	64,905	64,084	13,040	12,712	12,536	6,106	6,040	5,885
밭 면 적	70,845	69,682	68,103	8,045	8,097	7,941	4,912	4,825	4,713
가구당 경지면적	1.44	1.46	1.55	1.34	1.49	1.53	1.47	1.47	1.62
구 분	옥 천 군			영 동 군			충 주 시		
농 가 수	8,727	8,248	7,567	8,981	9,256	8,560	12,085	12,167	11,297
농가인구	27,570	23,490	20,976	26,621	28,418	24,274	36,773	37,622	32,198
경지면적	10,051	9,835	9,536	10,955	10,794	10,626	17,126	17,351	16,866
논 면 적	4,222	4,008	3,848	3,619	3,472	3,485	8,343	8,340	8,312
밭 면 적	5,829	5,827	5,688	7,336	7,322	7,141	8,783	9,011	8,554
가구당 경지면적	1.15	1.19	1.26	1.22	1.17	1.24	1.42	1.43	1.49

자료 : 시 · 군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 대청 · 충주댐 주변 규제지역 현황

면, 가덕면, 현도면, 남이면), 보은군(회남면)이고, 수변구역은 보은군(회남면, 회북면), 옥천군(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옥천읍, 이원면, 청성면, 군서면, 군북면), 영동군(심천, 양강, 양산 일부)이다. 그리고 충주댐은 수변지역으로서 충주시(양성면, 소태면, 엄정면, 가금면, 금가면)가 해당된다<그림 1>.

2. 대청 · 충주댐지역의 친환경농업 실태

1) 대청댐 주변 지역

대청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농업은 청원군의 문의면 · 남이면, 옥천군의 안남면 · 군북면 · 옥천읍 · 군서면 · 이원면 · 동이면 · 청성면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문의면, 동이면, 이원면, 옥천읍, 청성면, 군서면의 순이며, 남이면, 안남면, 군북면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청원군 문의면은 대청댐 주변지역 중 인증농가수의 45.1%, 인증면적의 38.7%, 인증계획량의 35.9%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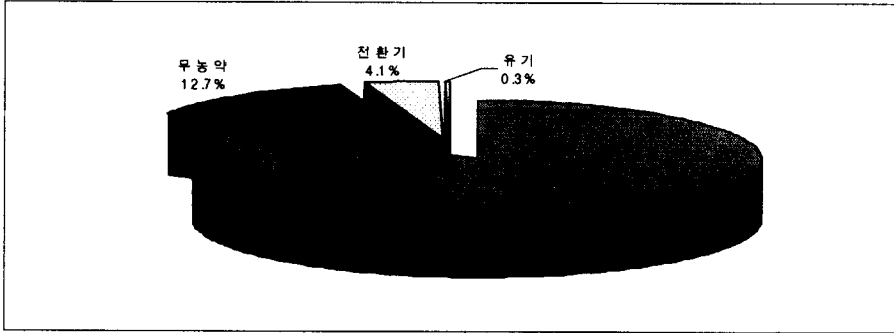
<표 2> 대청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단위 : 호, m², 톤)

구 분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계획량
청원군	문의면	297	1,371,793	2,169.7
	남이면	2	4,466	427.0
옥천군	안남면	5	18,979	98.6
	군북면	2	6,840	21.0
	옥천읍	66	484,920	1,021.5
	군서면	22	91,145	141.0
	이원면	42	298,812	318.6
	동이면	162	973,117	1,731.8
	청성면	61	290,132	120.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농약이 8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무농약 12.7%, 전환기 4.1%, 유기 0.3% 등의 순이다. 저농약 인증유형의 비중이 많은 이유는 과일류와 채소류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이다<그림 2>.



〈그림 2〉 대청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현황

대청댐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살펴보면, 문의면,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은 복숭아, 포도, 배, 딸기, 수박 등 과실류 인증비중이 높고, 안남면은 토마토, 상추, 양상추 등 채소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성면에서는 무농약 쌀 재배면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이면과 군북면은 대청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2) 충주댐 주변지역

충주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은 양성면, 소태면, 엄정면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보면 소태면과 엄정면이 비슷한 규모이고, 양성면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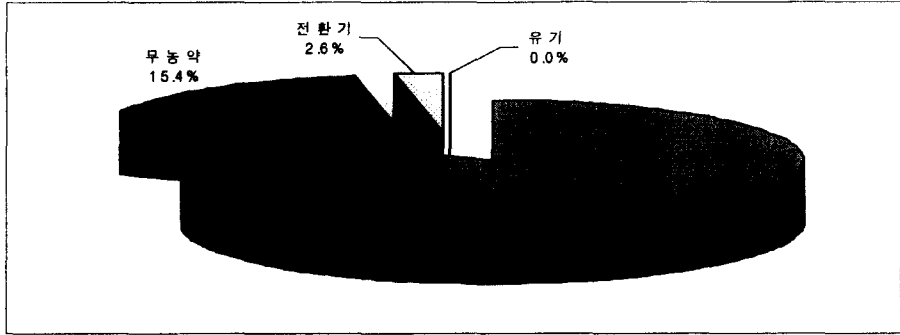
〈표 3〉 충주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단위 : 호, m², 톤)

구 분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계획량
양 성 면	5	39,933	29.5
소 태 면	16	196,931	483.7
엄 정 면	18	220,017	472.0
계	39	456,881	985.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충주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을 보면, 저농약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무농약(15.4%), 전환기(2.6%) 등의 순이며, 유기 인증은 없다. 저농약 인증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청댐 주변지역과 같이 과일류와 채소류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이다<그림 3>.



〈그림 3〉 충주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현황

충주댐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살펴보면, 양성면, 소태면, 엄정면에서는 저농약 위주의 복숭아와 호박 등의 과실류와 과채류 인증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태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인증 농가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인증 면적이 많고 재배하는 품목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Ⅲ.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의향 조사

1. 조사 개요

이 조사는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의 규제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청댐 주변지역에서는 220명, 충주댐 주변지역에서는 13명을 표본 추출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표 4〉 표본농가의 지역별 분포

조사지역	대청댐 주변지역				충주댐 주변지역	계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충주시	
농가(호)	26	43	27	124	13	233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8.3%, 50대~60대가 58.4%였으며, 70대 이상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졸업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도 18.5%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3~5인이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인 23.2%,

5~6인이 14.2%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가족구성원 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평균 인원은 1.83명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종사 인원도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들의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60.5%로 댐 건설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영위한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농업에 대한 만족도 및 농업소득

댐 주변지역에서 농업을 하는데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족 요인으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15.0%,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장래불안’ 22.3%, 그 밖에 ‘육체적으로 힘들다’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소득이 적고, 각종 규제에 대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농촌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는 ‘주거환경 열악’ 36.9%, ‘교육여건 열악’ 28.3%, ‘복지시설 미흡’ 15.5% 등 농촌사회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8.1%, ‘교통여건 열악’ 5.1%로 나타났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1,000만원 이하가 3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0~1,500만원 22.7%, 1,500~2,000만원 21.0% 등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비중은 각각 75.3%, 24.7%로 나타났다. 이는 댐 주변지역 농가의 농업소득 규모가 크지 않으며,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의향

댐 주변지역에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친환경농법 적용)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49.8%를 차지하였으며, ‘고려중이다’ 15.5%,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4.7%, ‘별 관심이 없다’ 20.2% 등으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중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친환경농법 시행 초기의 생산량 감소와 투자비용 등의 과다 우려,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도입 동기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 23.8%,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 의해’ 18.9%, ‘일반농법의 피해 때문에’ 12.8% 등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저농약 재배’가 35.4%로 가장 많고, ‘무농약 재배’

11.6%, '유기재배' 3.0%, '전환기 유기재배' 0.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6.3%는 아직 인증 획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술 및 지식취득 경로는 '정부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35.4%, '인근 친환경농업실시 농가로부터' 20.7%, '각종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16.5%, '관련문헌 및 자료를 통해' 7.9%, '친환경농업 생산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6.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지도와 학습이 개인의 학습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산량 증감 여부 및 평균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였으며,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다' 23.8%, '증가하였다'가 4.9%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농업을 적용한 이후 최초 몇 년 동안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생산량의 평균 증가율은 20.6%, 감소율은 21.9%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출하처는 '일반 도매시장' 25.6%, '생활협동조합(생협)' 22.6%, '농협 하나로마트' 11.6%, '소비자단체' 9.1%, '농장 및 도변판매' 6.1%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직거래 판매'가 2.4%를 차지하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의견이 37.2%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도 많았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영농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51.8%로 가장 많고, 확대할 것이다' 34.2%, '축소할 것이다'가 4.9%로 나타났다.

담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26.2%, '적절한 가격수준' 20.7%, '판로확대' 20.1%,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17.1%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발전 여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을 비교하면 '친환경농산물이 더 비싸다' 50.0%, '더 싸다' 3.0%, '비슷하다' 42.7%여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간의 가격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외소득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5.8%, '필요하지 않다' 14.6%로 나타났다. 이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비해서 운영 프로그램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사전 계획과 지원이 중요하다' 33.9%, '시행지역과 인근 도시와의 자매결연' 15.5%,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중대의 병행 추진'이 11.2%로 나타났다.

대청·충주댐 주변지역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향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친환경농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친환경 품질인증 획득 비율이 높지 않으며, 저농약 인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정보 획득 기회가 단선적이며,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째, 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섯째,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형태를 다각화하고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IV.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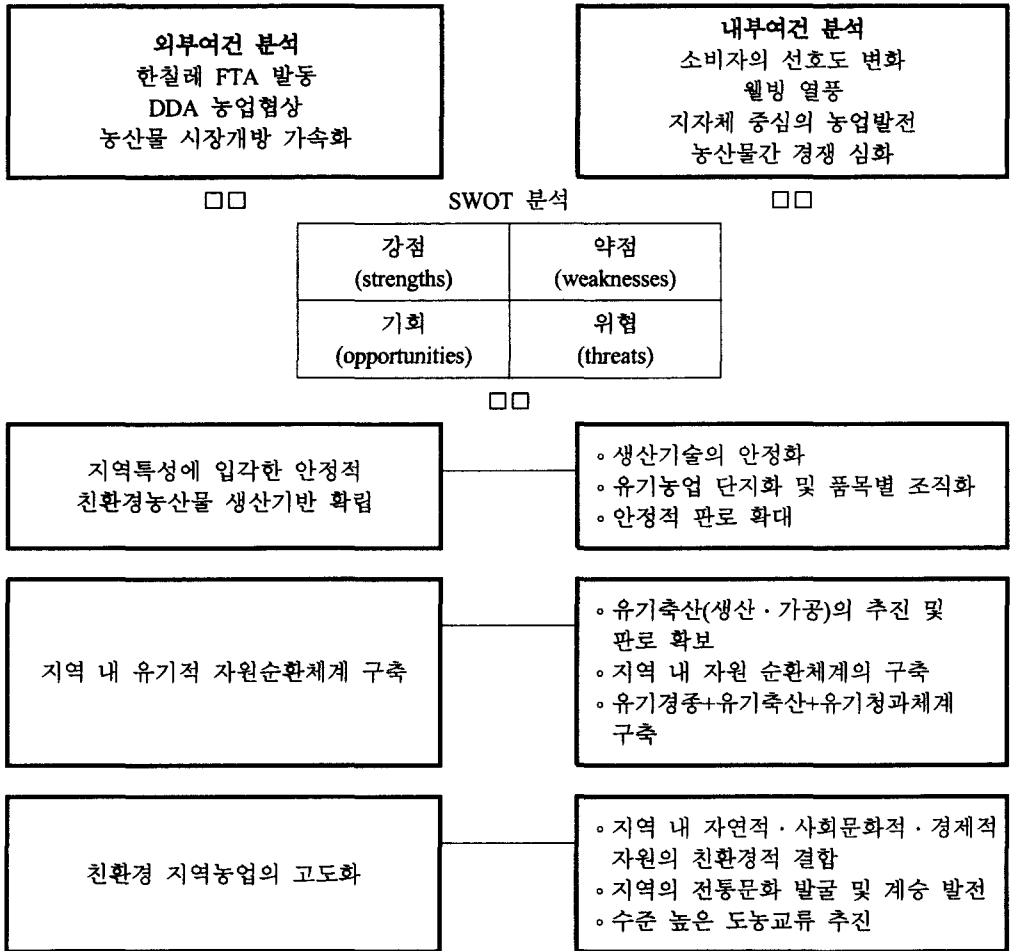
1.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의 접근체계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전략의 기본체계는 해당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지역농업의 틀을 기본체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농업·농촌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립, 지역 내 유기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지역농업의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국·공유지 하천구역(댐 저수구 포함) 친환경농업이나 농약과 비료 사용이 적은 작물재배가 허용되는데, 이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의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의 목표는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농업생태 환경의 유지와 보전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보전에 두어야 한다. 결국 물질순환체계에 입각한 농자재의 투입, 각종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생산방식과 생태환경(환경부하, 물질순화, 수계환경,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하가 큰 농업체제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화학비료와 농약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이 적절히 관리되어 지역 내 수계의 수질이 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오염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단위 환경 용량에 적합한 작물 및 가축생산으로 경종-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의 접근체계

2.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의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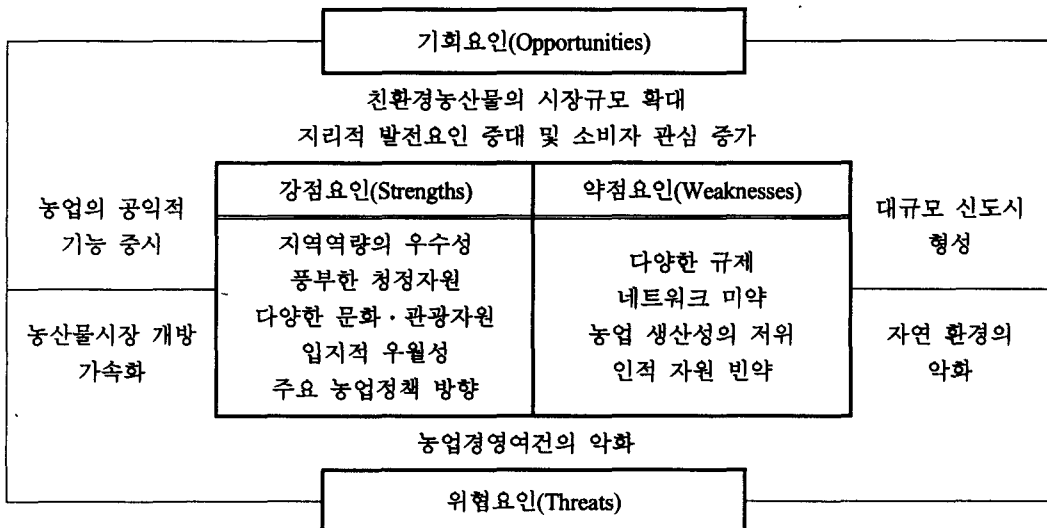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댐 주변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역발전 및 농업발전의 대안은 친환경농업이다. 특히, 수자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대청·충주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이 갖는 강점요인(strengths)으로는 지역역량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우선 기반여건을 살펴보면, 여러 규제로 인해 친환경농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청정자원,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이 있다. 특히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은 대도시·수도권 소비지와 근접하여 입지적 우월성이 뛰어나다. 친환경지역농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를 살펴보면, 특화된 생산수준을 비롯하여 친환경 및 지역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공급규모를 10%대로 늘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의 40%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의 종합대책 수립하는 등 향후 농정의 주요 방향도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발전과 일치한다.

약점요인(weaknesses)으로는 특별대책지역 관련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수변구역 관련 규제 등 댐 주변 규제이다. 그리고 지역농업 주체간 산·학·연·관 연계체제 등 유기적 연계체제의 발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계체제가 미흡함으로서 지역 부존자원의 유기적 활용에 한계를 노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에 부합한 사업지원체계를 발굴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판매전략 및 조직화가 미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인적자원 빈약, 탈농 및 이농심화 등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미비 등도 약점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회요인(opportunities)으로는 전국적으로 참살이(well-being) 열풍의 확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산림휴양·생태·환경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대 등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요소를 보면, 직거래, 생협 등의 틈새시장 확대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댐 주변 지역은 충청권의 지역적 역할 및 역량 증대로 새로운 대형 소비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의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시, 타부문의 연계수요 증대, 농촌관광, 지리적 발전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 친환경농업의 SWOT 분석

위협요인(threats)으로는 대외적으로는 FTA, DDA 농업협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 등이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내경제 및

수요 대응적 개발에 의한 환경문제 발생, 도로확장 및 무계획적인 공장설립, 각종 농축산관련 질병 발생,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과소화·경영인력 부족, 급속한 농촌자본 잠식 등 농업경영여건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무차별적으로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의 심화와 아울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우려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3.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의 방향

1) 댐 주변지역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제시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비전은 보전과 발전의 어메니티(amenity) 구현에 두어야 한다. 어메니티의 가치는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이용가치(use value)는 어메니티가 위치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이며, 선택가치(option value) 장래에 댐 주변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존재가치(existence value)는 어메니티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이며, 유산가치(bequest value)는 어메니티를 미래세대에게 전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메니티 공급은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댐 주변지역, 특히 농촌이 적절한 방식으로 어메니티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도시 지역과 공유하여 유기적인 경제의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를 개발하거나 시장을 형성·강화하는 것을 지원하여 어메니티를 공급할 수 있게 하면 그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이용가치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역 개발과 어메니티 보존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이다. 어메니티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어메니티 지역이 공급 활동으로부터 편익을 얻도록 보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어메니티가 공급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촌관광, 고유한 농촌의 이미지, 농산물의 상품화 등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면 댐 주변지역을 스스로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쾌적한 장소로 보존하는 어메니티의 보호 유인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적수준의 어메니티 공급과 가치 현실화가 중요하다. 즉,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들의 수요로 가정되는 수준에서 공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어메니티의 가치를 농촌지역에 보상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는 댐 주변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을 중심으로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이루어 여유, 정감, 만족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유는 경제성과 문화성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애착이 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감은

환경성과 환경쾌적성에 기초한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역을 만들고 수변으로 형성된 자연환경과 친숙한 접촉을 갖는 것이며, 만족은 거주자의 쾌적·안전·보건성에 기초한 것으로 농촌 생활에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농촌거주기반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2) 댐 주변 친환경지역농업 역량의 유기적 연계

댐 주변 친환경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논의와 역할 분담, 추진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 내 주요 관련기관 및 단체 간에 상호연계 및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효율적이며 성과를 거두기 용이하다.

주요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기반공사,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대학 및 연구소 등이 될 것이며, 가시화된 형태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칭 ‘친환경지역농업센터’는 창립 초기에 댐 주변지역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컨설팅, 출하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농정의 분담주체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환경지역농업센터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등 의지 여하에 따라 댐 주변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지역농업센터 창립 이전 단계로서 친환경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친환경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생산단위에서의 역량 강화는 일반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관심과 동기 유발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이 생산량도 낮고, 투자비용도 과다하며, 적정가격 보장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단위의 친환경지역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와 함께 농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투자비용의 지원과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활성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119조 투융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유기적 자원순환체계의 구축

친환경지역농업의 요체는 지역 내의 유향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유기농가간 협력을 통해 농업 부산물로 영농·사육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유기경종-유기축산-유기가공 연계체계(유기적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기적 자원순환체계는 지역 내 유향자원을 이용하여 유기경종 부문에 신규작물 도입을

위한 토지 공급, 유기축산 부문에는 사료포와 조사료원(산야초 등) 공급, 유기경종 부문에서는 유기축산 부문에 볏짚과 각종 조사료원을 공급, 유기 가공공장에 원료농산물 공급 등으로 구성되며, 유기축산 부문은 유기경종 부문에 축분 이용 유기퇴비 공급, 유기 가공공장은 유기축산 부문에 부산물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순환을 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지역별 핵심 작목 및 경영-유통방식의 재편이 필요하다. 관내 주산지 작목을 지역별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품질인증과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단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농업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농업 소득이 적은 소농과 고령·여성농업인들이 유기농업 단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친환경농자재·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농촌관광과의 연계 추진

담 주변지역은 아름다운 경관 및 깨끗한 자연환경, 세시풍속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 농·특산물 생산, 농사·생태·전통문화 체험 등 각종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쉴거리 등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차원의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마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업의 연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려될 수 있으나, 우선 대청호·충주호 주변지역 친환경 환상관광회랑(環狀觀光回廊)지대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청호·충주호 주변지역은 관광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개발활용 접근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청호와 충주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과 문화자원 및 친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관광자원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환상관광회랑 지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환상관광회랑 지대는 도로형성 여건이나 관광문화자원의 분포형태에 따라 다양한 테마형의 관광벨트로 구성하되 전체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관광회랑과 테마관광회랑 등으로 개발하여 대청호와 충주호반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적극이용하고 보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청정 환경을 공유하며 역사와 문화, 지역자원 등 제반 여건이 다른 인접지역을 상호 연결하면 수자원을 중심으로 각각 거대한 환상관광회랑지대가 형성되어지는데, 이는 열악한 여건과 각종개발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지역들을 협력과 연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5)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명품화·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명품화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가속화에 대응,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양적으로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확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즉, 친환경농업 초기부터 유기재배를 시작함으로써 품질의 차별화를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품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품화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 발전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촌관광마을의 연계 조성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다.

유통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댐 주변지역의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조직과의 연계 및 직거래 유통을 강화해야 한다. 소량생산체제로 품질차별화와 틈새시장 전략으로서 도시소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이다. 계약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생산자는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유통 주체를 역시 품질이 확실한 농산물을 취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가격 보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이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 재배를 유도하여 예정생산량 모두를 계약하여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게 된다.

V. 결 론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화와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지역농업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지역농업을 포함한 지역산업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역을 특화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역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댐 주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인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지금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규제지역별로 규제되는 행위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해당 규제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있어서 규칙적인 성향이나 체계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은 댐 주변지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체계이다. 때문에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등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와 질소·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어떤 지역보다 유리한 지역이 댐 주변지역이다.

이는 산업·자연·환경·전통·문화적 자원 등의 지역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활용해서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의 작목별 주산단지가 특화되어 있어서 농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작목과 지역은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특화시켜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은 농업과 공업 및 상업, 관광 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논문접수일 : 2005. 1. 25. 최종논문접수일 : 2005. 3. 9.]

참 고 문 헌

1. 박현태·강창용·정은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영동군. 2003. 영동군 통계연보.
3. 옥천군. 2003. 옥천군 통계연보.
4. 충주시. 2003. 충주시 통계연보.
5. 충청북도의회. 2003.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
6. 충청북도의회. 2003. 「충주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
7. 김호. 1993.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실태와 유통계열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8. 허승욱·김호. 2004. 친환경농산물의 지불의사금액 분석과 그린 마케팅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2(3) : 317-331.
9. OECD. 오현석·김정섭 옮김.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